

# DJ-盧 대립 기류... 민주당 '곤혹'

## 盧 “호남당론” vs 박지원 “배은망덕” 1라운드 이어 박지원 “盧 약속 어겨 남북정상회담 무산” 2라운드 黨 “안그래도 지지율 정체 심각한데...자중 했으면”

민주당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이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측 간에 미묘한 대립기류가 감지되면서 민주당내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대립의 쟁점은 호남당 논란과 남북 문제. 선제 공격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달 노 전 대통령이 “호남의 단결로는 영원히 집권당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린 것. 이에 김 전 대통령의 ‘입’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배은망덕”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양측은 격돌했다.

다음 공격은 박 의원이 퍼부었다. 그는 10·4선언 1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지난 1일 “참여정부 초기 우리 측의 약속 위반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됐다”는 비화를 공개, 공방의 ‘2라운드’를 시작했다.

이에 진노진영에서는 “하필 잔치날에 해도해도 너무한 다”는 불만이 터뜨렸다.

양측의 대립에는 민주당 재건을 위해 호남표의 결집이 중요하다. 김 전 대통령 측과 ‘탈(脫)호남’을 하지 않고는 정권 탈환이 불가능하다는 노 전 대통령의 기본적 인식 차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남북관계와 관해서는 참여정부 초기의 대북송금특검을 둘러싼 해묵은 앙금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측의 갈등이 재연되면서 전통적 지지층 복원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복원을 고려해왔던 민주당 내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지 않아도 지지율 정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내 갈등이 증폭될 경우 민주당의 끝없는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5일 “지지층이 분열돼 지지율이 꺾어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충돌하면 상처만 나지 않겠느냐”며 “현실정치에서 떠난 전직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뒤늦은 시정질의 연기 요청, 이유 뭔가”

### 정가 브리핑

#### 광주시의회 반발 움직임

○--광주시가 국정감사 준비 등을 이유로 시의회 시정질문의 연기를 요청, 의회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오는 13~15일 예정된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 일정을 늦춰달라는 입장을 시의원들에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광주시측 입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 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 건수가 800건이 넘는데다, 시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도 400건이 넘고 광주비엔날레(9월 5~11월9일), 전국장애인체전(5~9일), 전국도서관대회(8일), 김치축제(15~19일), 정음성국제음악제(22~25일) 등 각종 행사까지 겹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지경이라는 것이다.

반면 시의회는 돌발적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시정 질문 일정을 확정해 통보한 상태에서 일정을 늦춰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광주시가 행사 개최 계획 등을 감안해 사전에 요청하면 조율이 가능할데 뒤늦게 연기해달라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시정 질문에서 제기된 민감한 사안이 국감에서 또다시 거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많다.

“초당적 대북특사단 파견해야”



○--민주당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은 5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북측이 신뢰할 수 있고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남북화해협력정책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초당적 대북특사단의 파견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사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 정부가 비핵개방 3000 정책의 폐기와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계승을 대내외에 공식 천명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정당·사회단체의 대표를 초당적 방북단에 포함해 의제선정부터 남북관계 해법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전개하자”고 강조했다.

#### ‘식품안전처’ 신설 개정안 발의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은 5일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중국어 멜라민 파동 등 식품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안전 관리업무가 8개 부처 26개 법률로 다기화 돼 있어 식품안전 행정의 통합적인 수행을 저해하고 있다”며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식품안전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 종합적인 식품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김지영기자 jkpark@

## “공공기관장 39% 임기 중 중도하차”

### 기획재정부 백재현 의원 분석

이명박 정부 들어 전체의 39%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장이 중도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공공기관장 80%가 감사를 전후로 해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부 백재현(민주당) 의원이 5일 정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취합·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전체 303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임기 중 중도하차한 곳은 96곳(31.6%), 사표 수리 후 공석인 경우는 23곳(7.5%)이었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뒤 교체된 경우

는 23.7%(72곳), 교체되지 않은 경우는 103곳(33.9%)이었다.

백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적 임기를 무시한 채 일괄사표 강요로 공공기관장을 대거 교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후임 기관 장으로 선임된 정치권 인사들 면면을 보면 낙하산 인사의 전횡”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 박영선(민주당) 의원이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10일부터 6월4일까지 진행된 감사원의 ‘1.2차 공공기관 경영 개선 실태’ 감사를 받은 98개 기관장 가운데 80.6%인 79명이 감사 도중 혹은 감사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 정동영·김근태 다시 뛰나

### ‘민주연대’ 지도위원으로 나란히 이름 올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 무대를 떠났던 민주당의 정동영,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당내 진보개혁 블록인 ‘민주연대’의 상임고문직인 지도위원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의 뚜렷한 중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양대계파의 수장이었던 이들이 재기의 기지개를 펴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

민주연대가 정세균 대표와 386그룹 등 신(新) 주류에 대비되는 비주류연합체 성격이 적지 않은 만큼, 두 사람의 재기 여부가 총선을 거치면서 크게 위축된 김근태계, 정동영계의 부활 모색과 무관치 않다는 시선도 있다.

특히 대선, 총선 패배로 정치생명 최대 위기를 맞은 뒤 권도중대를 꿈꾸며 지난 7월 미국으로 떠난 정 전 의장이 지도위원에 직함을 걸자 ‘갑백’을 위한 징검다리 아니냐는 시선이 나왔다. 옛 지지구였던 전북 덕진의 보궐선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촉마 가능성을 점치는 선봉은 관측마저 현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 전 의장측 핵심인사는 5일 “민주연대측의 요청이 있었고 당이 개혁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동참한 취지였을 뿐”이라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으며 출마 얘기를 꺼

낸 적은 일절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현재로서는 당장 정치무대에 컴백할 가능성은 적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늦어도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돌백’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지난해 ‘통합의 밑알’을 자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전 의장은 민주연대 추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는 민주연대 활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당 내부를 향해서도 선명성 강화를 주문한다는 구상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정치 활동을 재개한 셈.

서울 도봉갑 지역위원장을 다시 맡았고 자신의 싱크탱크였던 한반도재단도 지난 7월 사무실을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옮기면서 재정비했다. 이번 학기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에서 초빙교수 자격으로 한국정치론에 대한 강연도 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진로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기다려달라”는 답으로 말을 아끼고 있다고 한다. 김 전 의장측 핵심인사는 “여의도에 있던 기간을 반추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개인적 진로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어떤 식으로든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 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 ‘10·4선언 1주년’ 정치권 반응 엇갈려

### 한나라·선진당 “재점검을”

### 민주당 “조속히 이행 해야”

정치권은 4일 지난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을 맞아 정상선언의 의미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1년 전 남북 정상이 만나 화해·협력의 의지를 확인한 부분은 높이 샀지만 10·4 선언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문제를 놓고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10·4 선언을 이행하려면 전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이 과거 정부 10년 간 어렵사리 쌓아올린 한반도 평화기조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10·4선

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10·4 선언은 남북한 화해·교류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계획”이라며 “감당 가능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이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10·4선언 1년이 지난 오늘 남북 대화는 단절되고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마저 중단됐다”며 “더군다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압수수색 등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까지 철저히 탄압하려는 것은 남북관계를 불신과 반목의 어두운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10·4선언 1주년을 계기로 남북이 다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p><b>조이 여행사</b> 234-3222</p> <p>인도네시아 여행</p> <p>3박 4일 (36H) 599,000</p> <p>3박 4일 (45H) 759,000</p> <p>3박 4일 (36H) 249,000</p> <p>3박 4일 (36H) 439,000</p>	<p>일본 여행</p> <p>3박 4일 (36H) 599,000</p> <p>3박 4일 (45H) 759,000</p> <p>3박 4일 (36H) 249,000</p> <p>3박 4일 (36H) 439,000</p>	<p>중국 여행</p> <p>3박 4일 (36H) 249,000</p> <p>3박 4일 (45H) 439,000</p> <p>3박 4일 (36H) 249,000</p> <p>3박 4일 (36H) 439,000</p>	<p>중국 여행</p> <p>3박 4일 (36H) 249,000</p> <p>3박 4일 (45H) 439,000</p> <p>3박 4일 (36H) 249,000</p> <p>3박 4일 (36H) 439,000</p>
---	--	--	--